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2010. 10. 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10. 10. 4(월)	담당자	김세환 부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51	총 11 매

제목: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열려

금융연구기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개최

국내 3대 금융권역의 대표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원장: 김태준)과 자본시장연구원(원장:김형태),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0월 5일(화)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개최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연구원 이석호박사, 자본시장연구원 권세훈박사, 보험연구원 윤성훈·진익 박사 외에도 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 한신대 배준호교수,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시장, 재정 및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금융산업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병주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금융위 정은보국장, 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 금융투자협회 장건산 부회장, 생보협회 박창종 부회장, 손보협회 이춘근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자료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보험연구원 윤성훈 박사는 노후보장수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이 장수위험을 자체 또는 금융시장을 통하여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하락과 예금 및 주식수요 감소에 대비해 금융업권별로 금융중개기능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은 조세수

입 및 세입구조, 재정규모와 세출구조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후 복지·사회보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을 발표한 한신대 배준호교수는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간 유대관계 약화로 노후소득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가정 차원보다는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험료율 인상·급여수준 인하·수급개시연령 인상·기금운영수익 확대·관리운영비 감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을 들었으며, 그 외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미수급·저수급자 문제 해결,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기금지배구조 개편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건강보험"을 발표한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는 오래살고 싶은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축복이지만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가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Global 건강강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건강투자가 요청되며, 미래 건강강국이 가져다 줄 가치를 감안하여 새로운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와 보험업의 역할"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진익박사는 실물부문의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므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업의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방지를 위해 연금상품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 지급보장 제도 도입,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마련, 금융보증 제도 도입, 녹색성장산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국가재보험 형태의 공사간 위험공유체계 구축 등 공사부문간 공조 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은행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 가계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금융자산 중에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소득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 전략과 전 생애주기를 감안한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 등에 기반한 소위 'total service' 전략 외에도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기타사업 부문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저출산·고령화와 금융투자업의 역할" 주제 발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권세훈 박사는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재정을 통한 공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나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지원과 결합된 금융수단을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출산장려·육아지원·저소득가구 및 장애아동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통합한 어린이펀드와,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지급기관이 부담하게 될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장수채권 및 장수스왑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영향(저축과 투자 부진, 고령화 관련 위험 확대,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관한 기존 주장들의 재평가 외에도 "금융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가능성도 높다"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별첨 : 컨퍼런스 발표자료 요약본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컨퍼런스 발표자료 요약본

1.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윤성훈 박사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만큼 고령화 관련 위험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가장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고령화 관련 위험을 가계 부문으로 이전하고 있어 가계의 노후준비(노후소비 및 의료비 지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매우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 하나 가계의 저축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저축여력도 높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의 노후준비 부족 및 잠재성장률 하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가 자산수요, 자산가격, 금융중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가계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수요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보장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이 주택연금, 종신연금 등 연금 관련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채권 등 안전자산과 연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주택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수요와 예금수요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 기조 지속, 펀드문화 형성,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에서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주식 및 보험 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험 연금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후보장수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다. 금융회사가 연금과 같은 노후보장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장수위험을 인수하는 한편 이를 헷지해야 하는데, 동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자산을 장기간 운용할 수단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금융이 이에 적합한 노후보장수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수위험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하여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장수위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한편 장기국채시장 및 믈가연동채권시장 등을 육성하여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에 금융이 적절히 대응할 경우 노후보장이 강화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역모기지 등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상당 부문 완화될 것이다. 이처럼 금융이 적절한 노후보장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셋째, 현재 은행, 자본시장, 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중개기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은행의 경우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출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등 금융중개기능의 질이 좋지 않다. 자본시장의 금융중개기능도 GDP 대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199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규모면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보험의 금융중개기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금융중개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저축률이 하락하여 금융을 통해 투자로 중개될 자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예금수요와 주식수요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영향 역시 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을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업권별로 금융중개기능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중개기능은 먼저 자산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장기채권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며, 가계저축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와 대출의 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평가능력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전문인력의 확보 및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증소기업금융 활성화, 고위험 고수익의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이 가계의 노후보장수단을 적절히 공급하고 금융중개기능 역량을 제고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2.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 및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투입 저하를 야기하고, 노동력 질과 양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간접적으로 자본투입, 인적자본 투자, 생산성 등의 하락을 초래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등의 추계에 따르면 최근의 4%대에서 2040년대에는 1% 내외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및 자산시장, 산업구조, 소비지출 구조 및 저축률, 소득분배 등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노령화와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은 조세수입 및 세입구조, 재정규모와 세출구조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의 급증을 초래한다. EU국가의 경우 2060년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2007년에 비해 GDP대비 4.7%p(23.1%→27.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조세연구원・보건복지부(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현행 보건・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2050년 보건・복지지출 규모가 GDP대비 21.6%로 2009년 (9.5%)에 비해 12.1%p나 증가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규모가 선진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IMF 한국경제 보고서의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규모 추계결과나 2010년 IMF의 G20국가들에 대한 연금・의료 장기재정추계 결과와도 부합된다.

한편,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이민정책, 가족지원정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사회보장개혁, 노동력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2005년 9월)하여 범정부 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심각성 및 세입확충?세출감축 등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재정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정확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용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구조 등 조세제도 개편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도 미래 경제·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비경직성 경비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보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노력 등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순히 기존의 한시적 확장정책 철회(재정부문의 출구전략)나 국가채무비율의 위기이전 수준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부채비율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저출산 고령화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 소장

고령화는 오래살고 싶은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담에 상응하는 가치'(Value for Money)의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수명연장(건강)의 결정요인으로, 그리고 의료비증가의 결정요인으로 고령화가 지목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소득과 신의료기술을 주요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long-term care) 비용은 고령화가 큰 요인이다. 따라서 2008년에 도입한 장기요양보험과 향후 간병비의 보험급여화에 따른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료비는 2008년 GDP대비 6.5%였고 2020년에 10.8%로 전망되는데, 8%수준으로 통제를 제안하고 있다.(정형선, 2010.8) 이 비용은 건강보험이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의 적정수준은 재정적지속가능성 보다는 비용대비 가치를 평가하는 경제적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가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Global 건강강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건강투자가 요청된다. 의료접근성, 의료의 질, 지속가능성, 효율적 보건시스템, 보건산업경쟁력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그 기반이 되는 건강보험의 운영에는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는 정책수단과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미래 건강강국이 가져다 줄 가치를 보아야 한다.

4. 저출산 고령화와 보험업의 역할

보험연구원 진익 박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계부문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주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험업의 핵심 역할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초래될 경영상의 위험요인에 대해 금융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수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인 가계나 기업이 저출산·고령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업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보다 능동적 시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추가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자는 측면에 공감하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계부문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금융부문이 적극적으로 실물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제고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가 제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의 순효과는 경제성장률을 0.3%p 정도 감소시키는 수준으로, 실물부문의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이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전반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의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능동적 역할이 절실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로(소득대체율 55%, OECD 권고수준 60~70%) 가계의 추가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상품(연금, 건강, 장기간병, 변액보험 등)을 활용하여 가계부문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수명·건강·시장·자산부족 위험 등)을 인수해 주는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보험업 전체 영업 중 약 60% 정도가 수명·건강위험 인수와 관련됨.)

셋째, 기업부문에 대해서도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투자영업(대출, 회사채 투자 등)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보험영업(보증, 책임, 기술보험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녹색산업, 전문서비스산업, 고령친화산업 등)의 혁신과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업이 금융기능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발생(미국의 경우 연금가격 중 20% 정도가 위험프리미엄으로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 확대 지연)이 예상되는 바, 공사

부문간 공조 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종신연금 등 장기성 연금상품 관련 세제혜택 확대, DB형 퇴직연금 연금지급보장 제도 도입, 고령사회 보장기능 중심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마련(보험신탁, 자금이체 등), 장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증 제도 도입, 녹색성장 산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환경오염, 수탁자책임, 개인정보 등), 국가재보험 형태 공사간 위험공유체계 구축(종신연금, 장기간병, 녹색기업 금융보증 등)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저출산 고령화와 은행업의 역할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

주요국 사례 및 실증적·이론적 분석을 종합해보면,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 가계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금융자산 중에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국내 은행권의 고령화와 관련된 영업 및 기타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 기존 상품에 단순히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이 추가된 상품에 한정되어 있고, 연령·소득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 전략이 부족하고, 전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 등에 기반한 소위 'total service'전략이 필요하고, 아울러 은행영업과 관련된 부문 외에 기타사업 부문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고령화와 관련된 국내 은행권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주요 타겟 설정이 필요한데, 중·서민층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니즈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소득층의 경우, 다양한 PB, 패밀리 오피스 등과 같은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이들 계층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들의 needs(금융 및 비금융)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여전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소득층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영 금융회사(은행)의 직접적 상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적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되, 다만 비영업부문(또는 기타사업부문)을 통한 기여도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상품과 관련된 방향으로, 연령·소득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 전략을 통해 은행의 타 업권에 비해 전통적 이점인 안전성, 신뢰성 등을 무기로 안정적 현금흐

름을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별 장기금융상품 및 신탁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컨설팅서비스 및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접목한 total service전략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원활한 장기물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세제혜택 등을 포함함 제도적 인센티브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로부터의 장기적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리스크관리 부문에서의 역량 제고도 필수적이다.

기타사업 부문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버 고객층을 대상으로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은행서비스 제공, 각종 교육·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older-user의 accessibility(특히 온라인 뱅킹 등과 관련된) 제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취약 고령층의 경우,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각종 공익사업, 서민금융 지원 등을 통한 이들 계층에 대한 관심 증대가 요구된다.

한편, 안전성을 근간으로 하는 은행으로서는 퇴직연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연금시장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고령자의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아울러 주택연금 고객을 신규고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은행 측면의 고령화와 관련된 영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고령층의 needs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위험 완화 및 자금중개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저출산 고령화와 금융투자업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권세훈 박사

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재정을 통한 공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지원과 결합된 금융수단을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금융수단으로 어린이펀드와 장수채권 및 장수스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펀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의 출산시점에 맞추어 부모가 금융회사에 저축계좌나 투자펀드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일정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계좌의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저소득가구 및 장애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이 결합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금 등으로 용처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싱가폴의 어린이펀드와 미국의 대학교육펀드 등을 주요 해외 사례로 소개하였다. 현재 국내 어린이펀드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등장한 상품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펀드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아동관련 금융지원으로는 정부의 아동발단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과 서울시 꿈나래통장 등이 있으나 이들은 시설아동 및 저소득가구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린이펀드와 구별된다. 향후 국내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장려, 육아지원, 저소득가구 및 장애아동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통합한 어린이펀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채권(longevity bond) 및 장수스왑(longevity swap)은 전인구적인 기대여명증가로 인해 연금지급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장수채권은 해당 인구의 생존율이 증가 또는 사망률이 감소하면 이자 및 원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지니므로, 연금지급기관이 장수채권을 보유하면 장수위험 즉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위험을 헷징할 수 있다. 장수스왑은 장수위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고정되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파생상품이다. 연금지급기관은 스왑 상대방에게 사전에 정해된 연금지급 기대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대신스왑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상호 교환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들 장수위험 관련 금융수단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생존 및 사망자료를 축적하고 이에 근거한 장수지수(longevity index)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금지급의무자에 대한 회계 및 자기자본규제, 그리고 연금의무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해 장수위험의 가치 및 규모를 적절히 파악하도록 하고, 장수위험이 효율적인 관리자에게로 이전되는 거래가 활성화되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